

새로운 한반도를 향한 여정의 시작

조한범(통일연구원)

I. 코로나-19, 한강의 기적, 한류, 그리고 대한민국

■ 코로나-19 사태와 대한민국

미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 등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한국은 K-방역으로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선진국을 능가하는 한국의 우수한 의료체계와 방역 능력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정부의 대처능력과 사회의 투명성도 확인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는 총력 방역체계로 대응했으며,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등 관련된 전 영역에서 투명성을 유지했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가들이 소극적 대응은 물론 확산 실태와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보 은폐의 책임론에 직면해 있으며, 보건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은 아직까지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국민성이다. 국민들은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보건의료 지침 등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의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 군대 등 모든 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 코로나-19 앞에 대한민국은 의연했으며, 그 원천은 국가능력과 국민성이었다.

■ 한강의 기적과 한류

K-방역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에 세계가 인정하는 한강의 기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휴대전화의 세계적 아이콘이며, 현대 자동차는 세계 5위의 완성차 업체로 올라섰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에는 한국경제를 영원한 2류로 평가하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미 옛날 이야기다.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3배에 달하나 2.5배의 인구를 감안할 때 한국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하는 것도 머지않은 미래일 수 있

다.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일본이 취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의 피해가 더 큰 상황이다.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과거 7080 세대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매료시켰던 인기 라디오 음악은 대부분 팝송이었다. 당시 한국의 가요는 청소년과 청년의 창의적 욕구를 만족시킬 만큼 다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동일 세대들은 가요를 즐겨 듣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K-팝을 부르고 한국 아이돌 그룹의 안무를 따라 춤추고 있다. 세계 최정상에 오른 BTS,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기생충은 문화예술 한류의 위상을 상징한다.

한국인은 타고난 신체적 약점으로 특정 스포츠 분야는 넘보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이 과거 우리의 고정관념이었다. 그러나 야구는 세계 정상을 넘나들고 있으며, 2000년 월드컵 축구 4강 성과도 단지 홈 어드밴티지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 골프는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빙상, 수영,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 영역에서 K-스타들이 탄생한 지 이미 오래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는 2차 세계대전 전후 건국한 많은 국가와 비교할 때 독보적이다. 대립적 정치구도와 냉전문화, 그리고 이념 및 사회갈등 등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군사독재에서 문민정부를 거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유혈사태 없이 대통령을 탄핵한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위와 대중봉기에서 약탈과 방화 등 무질서의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인의 성숙된 정치의식을 입증한다.

■ 대한민국의 재발견

세계는 한국의 국가능력과 국민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카피캣에 의지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선진국 사회를 이상적 목표로 설정했던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과 한류를 거쳐 K-방역을 통해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새로운 한국 모델, 즉 K-모델의 가능성까지 탐색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해 있었고, 지난했던 과거와 즐거운 이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다. 이제 우리는 '만년 선진국의 뒤'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분단 75년,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다.

II. 4.15 총선: 냉전에서 평화로

■ 진보, 한국 정치의 주류가 되다

2020년 4.15 총선은 한마디로 ‘한국정치 주류의 교체’로 평가할 수 있다. 장기간 한국 국내정치의 주류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던 보수진영은 2020년 4.15 총선을 통해 진보진영에 자리를 넘겨주었다. 보수진영의 장기집권을 단지 일부 독재세력에 의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보수정권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민의를 모두 강요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의 기억은 세계적 냉전구도와 극단적인 남북 대립구도 속에서 재생산됨으로써 한국정치의 보수화에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남북 체제경쟁의 승리와 산업화의 요구는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한 환경적 요인이었다.

1945년 분단 이래 한국 국내정치의 주류는 반공을 기치로 내세운 보수정권이었으며, 세계적 냉전구도 속에서 북한과 적대적 공존관계를 형성했다. 대립적 남북관계에 기반을 둔 보수정권은 ‘적으로서 북한’을 규정했으며, 미국은 한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절대적인 동맹으로 자리 잡았다. 자유당 정권에서 시작된 독재체제는 반공·반북을 효과적인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북한에 대한 동조나 유사한 주장을 이적행위로 간주했다.

평화통일과 남북대화를 주장했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비롯해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등 많은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조작된 용공사건을 통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소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 관철을 위해서 용공조작을 통해 민주인사들을 탄압한 대표적 사례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사건조작을 주도했으며, 관련자 8인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후 단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었다. 한국 공권력과 사법의 치욕이자, 진보진영의 암흑의 날들이었다.

그러나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를 향한 지난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시민혁명을 통해 한국의 시민은 스스로 군사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시대로 진입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독보적이다. 4.15 총선을 통해 탄생한 진보진영의 압도적인 슈퍼여당은 우연이 아니며, 한국 현대사에 점철된 민주진영과 평화세력의 지난한 노력의 결과라고 봐야 한다. 민주화 운동 시대인 80년대 청년세대의 대부분이 60대 전후라는 점에서 한국전쟁과 냉전체제를 인적으로 이미 세대교체 한 상황이다. 이번 4.15 총선의 결과는 긴 민주화의 여정과 피어린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 보수, 냉전의 추억에 머물다

4.15 총선에서 보수진영은 내부의 분열로 패배를 자초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국민적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보수 야당의 정치적 성찰이 필요했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박근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열과 정쟁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보수 야당의 보다 큰 문제는 건강한 보수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보수 야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새로운 비전과 대안이 결여된 상태에서 집권여당과 진보진영에 대한 감성적 공격에 머물렀다. 망언과 구별이 어려운 잦은 말실수는 진보진영과 집권 여당을 향한 맹목적인 분노와 증오의 결과였으며, 결국 4.15 총선의 패배를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보수진영은 여전히 냉전의 추억에 머물렀다. 세계적 냉전구도가 해체된 지 이미 30여 년이 경과했다. 2000년 1회, 2007년 1회, 2018년 3회 등 세 정권에 걸쳐 이미 5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0여 년간 지속된 금강산 관광으로 193만여 명이 북한을 다녀온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으며,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북한의 독재체제와 인권탄압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당장에 해결이 어려운 장기적 과제라는 현실적 제약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역시 긴 역경의 민주화의 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다.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수 야당은 냉전적 반복 이데올로기에 집착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에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명을 탄생시킨 선택이 이를 입증한다.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 두 명은 모두 대립적 반복관을 지닌 인물들이다. 탈북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고려할 때 이들의 성향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탈북민 3만 명에 경직된 반복관을 지닌 두 명의 탈북민 보수야당 국회의원의 탄생은 시대사적 변화에 비추어 냉전의 추억일 뿐이며, 협력의 남북관계 시대에 이데올로기적 과잉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다.

한국의 보수진영은 분열과 아울러 미래비전 제시의 실패, 그리고 이미 효용가치를 상실한 과거의 대립적 이데올로기와 반공·반북주의에 집착했으며, 결국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에 주류의 자리를 넘겨주는 결과를 자초했다.

■ 4.15 총선의 진정한 승자는 없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국정운영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적 안정을 유지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던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상황이다. 이는 이미 세계가 인정한 바이며, 그 자체로 놀

라운 업적에 해당한다. 세계 최정상 선진국들조차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해 당황했지만 우리는 의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상당 부분 현 집권세력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면 K-방역으로 입증된 한국의 국가능력은 현 정부의 업적으로만 치부될 수 없다. 선진국조차 부러워하는 의료보험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실시되었으며, 발달된 의료체제 역시 어제 오늘 완비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진정시킨 한국 경제의 탄탄한 기술력과 제조업도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결과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된 국민성이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제외할 경우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3년을 경유하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좋은 편이 아니다. 일관되게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으며, 친 기업문화의 형성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집권 초기부터 추구해온 탈원전 정책은 경제계와 학계를 둘로 나눈 채 공감대 형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압축적 성장모델이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세대는 미래를 꿈꾸기 어렵고, 자영업자들은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현실이다.

현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화두로 던졌으며,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감안했을 때 일정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과제에만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국의 적폐는 장기간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투명한 정치와 공정 사회, 그리고 다원주의 문화가 정착될 때 궁극적으로 청산이 가능하다. 어느 면에서 우리 모두는 적폐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 청산보다 전 사회적인 성찰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보면 4.15 총선은 정책의 차이도, 쟁점도 부각되지 않은 무미건조한 선거였다. 4.15 총선에서 진보진영 역시 새로운 비전의 제시에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서 보수진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19 방역의 후광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4.15 총선의 결과는 보수진영의 분열과 무기력에 편승한 진보진영의 어부지리 성격이 강하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노력이 융합된 종합적인 결실이다. 특정 진영의 패배와 승리가 아닌 대한민국이 걸어온 결과로서의 '오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교훈으로 얻을 일이다.

Ⅲ.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제언

■ 성찰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은 저발전 상태의 대중적 상실감과 이념적 대립을 기반으로 성장 지상주의를 통해 압축적 성장을 추구했으며, 그 결과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빠른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미국은 한반도가 냉전체제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적극적 후원자로 기능했으며, 권위주의 정권은 강압적 방식을 활용하여 압축적 성장모델의 논리를 충실히 적용시켰다.

압축적 발전과정과 병행하여 ‘압축적 문제’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했다. 경제발전은 불균형적이었으며, 분배의 요구는 성장논리에 의해 장기간 배제 당했다. 한국의 삶의 질은 OECD 평균을 한참 밑돈다. 한국인의 건강만족도, 대기질,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안전성 정도는 OECD 최하위권이다. 높은 자살률과 이혼율은 한국인의 ‘행복하지 않은 성공’의 상징적 지표이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우울증과 자살률은 과거 압축적 성장의 주역들이 직면한 오늘의 현실이다. 한때 한국의 대표적 오락프로그램이었던 ‘진짜 사나이’와 ‘1박 2일’은 분단체제에서 진행된 한국 발전의 기형성을 보여주는 서글픈 사례다. 경직된 병영문화와 승자독식(복불복)의 게임에 열광하는 선진국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말로 현대사회의 새로운 위험을 지적한 울리히 벡의 경고를 감안할 경우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사회적 불신이다. 분단체제와 진보 보수 간 대립을 기반으로 탄생한 사회적 불신은 사회갈등으로 재생산되어 고비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OECD 최고 수준의 한국의 사회갈등은 다른 국가와 달리 계층, 노사, 이념갈등을 중심으로 세대와 지역, 그리고 성별 등 다수의 영역과 연계되어 중층적이다. 국경없는 기자회견(RSF)가 공개한 ‘2020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42위에 그친다. 그나마 전 정권에 비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이지만 세계 12위권의 한국경제를 감안할 때 갈 길이 먼 셈이다.

세계의 갈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절반의 성공에 머물고 있다. 분단체제의 경직성은 사회적 관용과 대화, 그리고 타협보다는 강요와 배제를 한국사회의 지배 문화로 자리 잡게 했으며, 획일성이 다양성을 압도했다. 시장경제, 사회복지, 법치주의, 민주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 등 한국사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중요한 것은 분단체제로 비롯된 ‘발전의 비정상성’의 해소이며, 그 해답은 진지한 자기 성찰에서부터 출발한다. 4.15 총선은 정파 간 승리와 패배를 넘어 진보와 보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진지한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성찰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해당하며, K-모델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 합리적 진보와 보수의 탄생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수진영은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은 진보진영의 핵심적 가치에 해당한다. 한국의 보수진영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강한 친미·반공의 경향을 견지하며, 때때로 친일의 성향도 목격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진보진영은 민족주의적 지향성을 견지하고 있다. 독재정권과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의 진보진영은 북한의 독재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할 만큼 과묵하다. 정치적으로 장년세대가 진보적 성향을 보이지만 반대로 청년세대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발견된다. 보수와 진보의 일반적 특성과 다른 한국의 현실이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세계적 냉전구도와 한반도 분단체제는 한국의 이념적 지형을 복잡하게 만든 원인들이다. 친미·반공주의에 기반을 둔 군사독재체제와 민주·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 세력의 대립은 오늘날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뿌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과거의 이념적 지형은 구조적으로 변화했다. 이미 한국은 민주주의 단계로 진입했으며, 상수였던 한미동맹은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징하듯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3대 세습 독재체제라는 현대 세계사의 예외국가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구조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가 두 날개로 날 듯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진영의 형성은 사회와 국가의 건강성의 지표다. 보수가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진보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힘쓴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날은 앞당겨질 것이다. 탈냉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부합하는 21세기에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이미 수명을 다한 과거의 이념적 지형을 고집할 경우 미래의 K-모델은 허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다시 재정비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K-평화모델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분단체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 유고설 하나에도 한국의 증시는 출렁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영역에서 피해가 초래되는 현실이다. 세계 10위권 교역국가인 한국은 대륙이면서도 육상 교통·물류망은 단절된 채 오로지 선박과 항공기에 의존하는 수출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의 안보비용은 천문학적이며, 200여만 명의 남북 청년들이 오로지 소모적인 군사적 대치를 위해 청춘을 보내고 있다. 북한군의 복무기간은 10년에 달한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되 우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가속화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는 현재 교착국면에 놓여 있으며, 그 원인은 북·미 간 대립이다. 체제경쟁에서 패배한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했지만, 생존을 원한다면 먼저 핵을 내놓으라는 모순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이 아니라 평화상태의 가속화를 통해 북한 스스로 핵을 내려놓게 하는 창의적 발상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입체적인 체제를 구축하되, 평화프로세스를 가속화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재자가 아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주체적 역할이 필요하며, 출발점은 남북관계이다. 실현 가능한 영역에서 남북관계의 가속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설득과 이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의 수시화가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열강의 이해가 중첩적으로 충돌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다. 남북관계에서 신뢰에 기반을 둔 자율성을 확보할 경우 주변 열강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북핵 위협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바로 우리라는 점을 자각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경주되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아울러 중장기적인 통일 프로세스를 가동하는 것은 K-평화모델의 핵심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경우 남북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지게 될 것이며, 이는 심화하고 있는 역내 미·중 전략경쟁 구도의 완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K-발전모델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남겼지만 역사의 교훈은 “광에서 인심 난다”에 가깝다. 단기적인 권력 장악을 제외할 경우 평화적인 통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번영이 뒤따라야 한다.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은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들이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K-발전모델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미 한국은 압축적 성장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고령화 저성장의 입구에 들어섰다. AI, 사물인터넷, 드론과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4차 산업 기술경쟁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우위만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되 평화경제에서 창의적인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평화경제의 출발점은 남북협력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각국 경제의 폐쇄주의와 배타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남북협력은 한반도만의 장점이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인구 8000만에 달하는 거대시장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진다. 남북한 간 철도·도로망의 연결만으로도 한반도는 역내 교통·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남북한 경제의 장단점을 융합한 새로운 남북 경험모델을 통해 상호 비약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 경제공동체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윈윈의 대안이다.

남북 경제공동체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 필연적으로 중국·러시아와의 교통·물류체계와 통합되고, 결국 일본 역시 이를 외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경제는 미래 K-발전모델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 무극화 시대의 도덕적 헤게모니

포스크 코로나-19 시대의 세계 리더십을 두고 미·중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두 국가 모두 상처를 입었다. 우선 자타가 공인해온 G2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태다.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위상은 흔들릴 개연성이 있다. 중국 리스크의 증대에 따라 생산기지로서의 매력 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정치와 사회의 투명성이며, 이는 국가 신뢰도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덕적 헤게모니에서 이미 한계를 보였다. 고대에서부터 당, 송, 명,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군사, 경제력과 함께 유교라는 도덕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중국은 이와 같은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통치를 위해 도덕적 헤게모니를 적절히 활용했다. 미국 역시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의 개막과 유지에 있어서 자유, 인권, 정의,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활용해왔다. 그동안 미국은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지구촌 차원의 위기에 개입했지만 그 비용은 더 큰 가치로 자국의 이익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중국을 포함해 타국을 강압적으로 대했으며, 한국 등 동맹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스스로 도덕적 헤게모니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미국의 무력한 민낯도 그대로 드러났다. 일본 역시 도쿄 올림픽을 의식해 코로나-19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재난에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냉전체제의 해체로 도래한 다극화 시대에 이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도덕적

지도국가가 부재하는 무극화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K-모델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 헤게모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 답은 K-평화모델과 K-발전모델에서 찾아질 수 있다. 관건은 한국적 평화 문화의 정착과 성장과 분배가 결합된 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간 안보(Human Security)가 총체적으로 보장되는 매력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다. 성공적 K-모델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한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주류 진보의 과제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니체 -

분단 이후 장기간 한국정치는 친미·반공을 이념으로 체제경쟁의 승리와 경제발전을 유일한 국가 목적으로 설정한 보수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공은 진보진영으로 넘어왔다. 진보진영은 한국 정치의 새로운 주류로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처음으로 안게 되었다.

‘강남 좌파, 강북 우파’, 이미 기득권 세력으로 전환한 진보의 한 단면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이어진 세 정권을 통해 진보는 과거의 억압 받는 대상이자 소수에서 기득권 주류로 재탄생했다.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거치지 않은 청년세대는 벌써부터 기득권 진보진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소위 ‘조국 사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은 진보진영 전체에게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기존 질서 변화의 추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기득권 세력화된 진보진영은 보수진영과의 투쟁을 위한 면책특권을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관성에 안주함으로써 스스로 패배를 자초한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의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진보 포퓰리즘의 위험성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다. 주류가 된 진보진영은 자신들이 지향할 질서를 고민할 때이며, 그동안 자신들이 싸워온 괴물과 닮지 않도록 스스로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이제 진보진영은 국내정치의 주류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에서 있다. 한국의 보수진영이 지배해온 질서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듯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질서 역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 미래를 지향하되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나가는 장기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포용과 협치(governance)의 정신이다.

4.15 총선의 결과는 소선거구제의 특성과 관련이 크며, 비례대표의 득표율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아직도 상당수의 민의는 보수적 질서의 관성 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포용과 협치를 통해 진보정치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진보진영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질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 보수진영이 걸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주류가 된 진보진영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K-모델의 완성'과 '모두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